

“공사 제경비 하향조정 철회해 달라”

(일반관리비·이윤)

도내 건설단체가 조달청의 시장시공가격 개선과 학교시설공사사업 시행 시 적정공사비 확보를 요구하고 나섰다.

17일 도청 본관 회의실에서 도교육청·강원지방조달청 관계자와 강원건설단체연합회 회장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건설산업 활성화 간담회에서 정동기 대한건설협회 도회장, 이강훈 전문건설협회 도회장, 허민구 도건축사회장 등은 이 같은 사안에 문제제기를 했다.

이 자리에서 정동기·이강훈 회장은 현재 도 교육청에서 학교시설사업 예산절감을 위해 공사원가계산서상의 제경비(일반관리비·이윤)를 하향조정해 발주하고 있는 지침을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다. 도 교육청은 지난

건설단체연합회 건설산업 활성화 간담회서 요구 조달청 자체조사 시장시공가격도 개선 필요 주장 도교육청 10월 발주 사업부터 운영지침 철회 밝혀

2월부터 학교시설사업 추진 시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의 강화, 신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 내진보강,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의 이유로 제경비 기준율을 절반 수준으로 낮춰 발주하고 있다. 도내 건설단체는 지방계약법에 명시된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기준율은 부실시공 방지 및 건설시공을 위해 산정한 법정 최소 비율인데도 아무 근거 없이 제경비를 하향조정했다며 지속적으로 개

선을 요구해왔다. 이와 함께 조달청이 자체 조사해 적용하는 시장시공가격과 자재가격이 예정가격을 낮추고 있어 적자 시공이 이뤄지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또 조달청이 복수 예비가격 작성을 위한 예비가격기초 금액 결정 시 조사금액을 삭감해 결정하고 있다면서 원칙적으로 조사금액을 삭감하지 말고 기초금액으로 발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민구 도건축사회장도 △건축주 제공 자료 소

요비용 누락 △리모델링·인테리어 설계업무 용역대가 비용 미적용 △용역기간이 과부족 △용역완료 후 발주자 요구 시 변경업무 무보수 처리 등의 문제점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도교육청은 건설업체의 요구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발주되는 학교시설사업부터 하향조정 운영 지침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강원건설단체연합회 관계자는 “도 교육청의 학교시설사업 추진 시 제경비 하향조정 지침은 도내 건설단체의 지속적인 개선 요구로 원만한 합의가 이뤄졌다”며 “아직 협의가 끝나지 않은 조달청의 부당한 예산절감 사례는 지역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이뤄지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우윤기자 faw4939@naver.com

社 說

올림픽 공사 도 업체는 구경만 하라는 건가

평창동계올림픽이 도민에게는 계곡으로 전락하는 모양새다. 정부가 마련한 '2018평창동계올림픽 지원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거듭 실망을 안기고 있다. 개최지인 도의 입장에서는 모범 자체가 부실하기 짝이 없는데 지난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에서조차 외면됐다. 대회 관련 시설 및 올림픽특구 내 경관형성·정비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 시설공사와 납품에서 지역업체 우대 명기를 요구했으나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무가력한 좌절감만 곱씹게 됐으니 불만 여론을 달랠 수도 없다.

열정을 결집해 동계올림픽을 유치한 목적이 무색하게 됐다. 무말할 여지없이 도의 획기적인 발전, 성장 동력으로 삼으려는 일이다. 이는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주어져야 성취되는 것이다. 대회 준비와 진행 등 일련의 과정에서 지역업체와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가능해진다. 기득이나 인프라가 부족하고 여건이 열악한 게 도와 지역업체들의 실정이고 보면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강자들이 독식하는 시장논리에 맡겨만 놔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래서 특별법 시행령에서 지

역 업체 참여지분을 명확하게 보장해 달라고 요청해온 것이다. 시행령에 지역업체 우대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도와 관련 업계의 최대 숙원이다. 갖가지 채널을 통해 정부에 호소했다. 그럼에도 어느 정도의 반영은커녕 기대마저 물거품이 됐다. 시행령의 지역업체 우대 관련 조항은 모호할 뿐이다. “시행자 및 특구사업 시행자는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해 기획재정부 장관 및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 기업의 우대 기준을 정한다”고 표기했다. 이 문구로 지역 업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그야말로 순진한 생각이다.

동계올림픽 시설 공사와 관련 사업이 외지 대형업체들의 몫이 가 될 판이다. 애써 마련한 예산을 외지 업체들에게 내주고 ‘남의 잔치’를 구경만 할 형편이다. 당장 실속이 없다. 불황에 시달려온 도내 건설업체들로서는 아예 희망마저 사라지게 됐으니 분통해하는 게 당연하다. 비단 건설 산업에만 국한되는 일이 아니다. 도내 지역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안이다. 도와 정치권, 해당 업계에서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간담회 도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가 17일 도청에서 정동기 대한건설협회도회장, 이강훈 대한 전문건설협회도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효석기자 hskim@kwnews.co.kr

“학교 공사 적정공사비 확보해야”

건설경기활성화간담회 동계올림픽 지역업체 우대 방안 마련 논의

도내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는 평창동계올림픽 공사에 지역업체 우대방안이 마련되고 공공기관 이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적정공사 비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는 17일 도청 본관 2층 회의실에서 정동기 대한건설협회 도회장, 이강훈 대한전문건설협회 도회장, 허민구 대한건축사협회 도건축사 회장 등 건설업계 대표와 최형선 도 건설방재국장 등 도 관계자, 강원 지방조달청 및 도교육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건설산업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지역 건설업체 우대방안이 동계올림픽 특별법에서 배제될 경우 의 차선택, 공공기관 발주시 적정 공사비 책정 등 건설업계 전반의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동기 건설협회 도회장은 “당초 동계올림픽 특별법시행령에 지역건설업체 우대방안을 포함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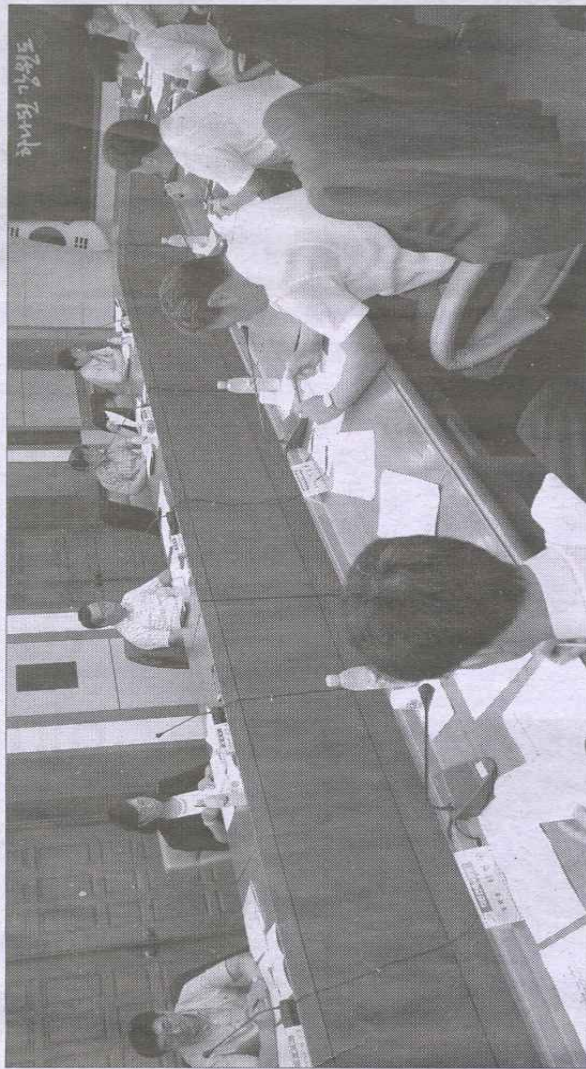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는 강원도의 실적공사비 적용기준 에 맞춰 100억원 이상 공사로 한정 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허민구 도건축사회장은 “설계 의 경우 통상 이윤이 20%이내인데 예산편성단계부터 20~30%를 일 방적으로 삭감당하는 등 일선 시군 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상황”이라 며 “도는 건설업계 전반에 제값받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일선 시군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형선 도 건설방재국 장은 “평창 동계올림픽 공사에 지역 업체 우대를 위해 그동안 중앙부처 장관, 국회의원 등을 찾아다니며 특별법 시행령에 포함해 줄 것을 요 구했지만 여의치 않았다”며 “현재 는 지침에 넣는 방안을 행정안전부 와 협의하는 등 차선택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지역 건설업체들도 대응 방안을 함께 고민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강원지방조달청과 도 교육청은 건설업계에서 요구한 예 비기초가격금액 삭감 및 시장시공 가격 개선, 학교시설공사시 적정공사비 확보 등과 관련, 개선방안 마 련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박현철 lawtopia@kado.net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단체 간담회가 17일 도청 본관회의실에서 최형선 도건설방재국장, 정동기 대한건설 협회 도회장, 이강훈 대한전문건설협회 도회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기로 했다가 이제는 장관고시로 추 진하고 있는데 이 역시도 낙관할 수 없는 만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 동안 조달청측에 표준 품셈 및 실적공사비가 있는 항목은 시장시공가격적용을 배제하고, 예

비가격기초금액 결정시에는 조사 금액을 임의로 삭감하지 말 것을 요 구했는데도 지금까지 지켜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강훈 전문건설협회 도회장은 “도교육청은 공사원가계산서상의

일반관리비를 기준을 6%에서 2.5% ~3%로, 이윤도 기준을 15%에서 8 ~10% 하향조정해 업체의 경영난 이 가중되고 있다”며 “작업조건이 열악한 중소규모 공사에게도 실적 공사비를 적용, 업계의 경영난이